현역 시장·군수 강세…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 땐 불꽃 튈 듯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분석

대부분 60% 넘게 득표…영암군수 '예상 밖 고배'

反 현역 단체장 연대 기류 만들어질지 관심 집중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 알림판에 지방선거 D-31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30일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공천이 확정된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대부분이 현역 단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넘지 못해 2차 결선 투표가 확정된 6곳의 경선지역에서도 현역 단체장들은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다.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 강세= 6·1 지방선거에서 전남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들의 우세함이 돋보였다. 현역 단체장으로는 3선 도전을 위해 경선에서 나섰던 전동평 영암군수만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고, 영광 김준성·보성 김철우·신안 박우량·영암 이상익·구례 김순호 군수는 경선을 무난히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 단체장들은 이번 경선 결과 과반 이상인 60% 안팎의 득표율을 보이며 경쟁 후보들을 큰 표 차이로 따돌리는 저력을 보였다.

이로써 김준성 영광 군수는 3선 도전에 성큼 다가섰고, 박우량 군수는 25·26대 재선에 이어 또 한 번 신안군수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박 군수는 사실상 4선 단체장이 된다.

이상익 영암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는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과 함께 지역 내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선 과정에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선에서 탈락한 전동평 영암 군수는 4.65% 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경쟁 후보인 우승희 전남도의원에게 패했다.

한편,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재심 신청 등을 예고하고 있어 재심 결과에도 주목된다.

◇2차 결선 투표 결과 주목=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구에서도 현역 단체장들이 모두 결선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된 무안과 무소속 현역 단체장인 장흥군을 제외한 전 선거구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분전하면서 모두 결선 투표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2차 결선 투표에 오른 현역 단체장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2차 결선 투표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2차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반(反) 현역 단체장 연대 기류가 만들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중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결선 투표 선거구는 여수(권오봉·정기명), 순천(오하근·허석), 강진(강진원·이승옥), 완도(김신·신우철), 장흥(곽태수·김성), 무안(이정운·최옥수) 등 6곳으로, 2차 결선 투표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지역 결선투표일은 다음달 4~5일이며, 무안만 다음달 5~6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속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민주당 강세 속에 기존 무소속 현직 단체장이나 컷오프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과의 불꽃 튀는 본선 경쟁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광주시의원 청년경쟁 선거구 2곳 재경선할 듯

여론조사 기관, 당규 위반 확인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광역의원) 청년경쟁 선거구 2곳이 경선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의원 청년경쟁 선거구인 서구3·광산4 선거구 2곳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300명 규모의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진행됐다. 하지만, 경선을 대행한 여론조사 기관이 당규를 어기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배심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사실이 드러나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시·도당 선관위 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재심위원회는 탈락 후보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 인용을 결정했고, 2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심이 인용되면 재경선이 실시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오늘 검찰 개혁법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총력 저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오는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1년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검수완박' 정국서 한껏 달아오른 여야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계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시작되는 윤석열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16명의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점도 대치 국면을 심화하는 요소다. 여야는 3·9 대선 일정으로 지방선거 대비가 늦어지면서 최근에야 광역단체장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윤 당선인의 잇따른 지역 순회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10개 국정과제 중 광주·전남 현안은 몇 건?

인수위 오늘 발표…대선 공약 반영 쉽지 않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한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지역 현안들이 배제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공약들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등을 놓고 번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 대거 배제된다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0개 국정 과제에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전진 배치될 예정이어서 지역 대선 공약이 들어설 틈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

또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담기는 어려워 지역 대선 공약이 대거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인수위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던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